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84.55	↓ 코스닥	919.16
	(+20.84)		(-0.58)
↑ 금리 (미국 9년)	3.738	↑ 환율 (원/달러)	1319.80
	(+0.049)		(+1.00)



연령 제한 대신 한도 줄인다... DSR 40년 적용 검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손질

전국 아파트거래 반년새 2배 급증
부동산 흐름 맞물려 실효성 의문

기존방식보다 대출비중 축소 돼
대부업 등 내몰려 부채의 질 악화

금융당국이 실제로는 50년만기 주택 담보대출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더라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만기 주담대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금융권이다. <관련기사 2면>

◆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

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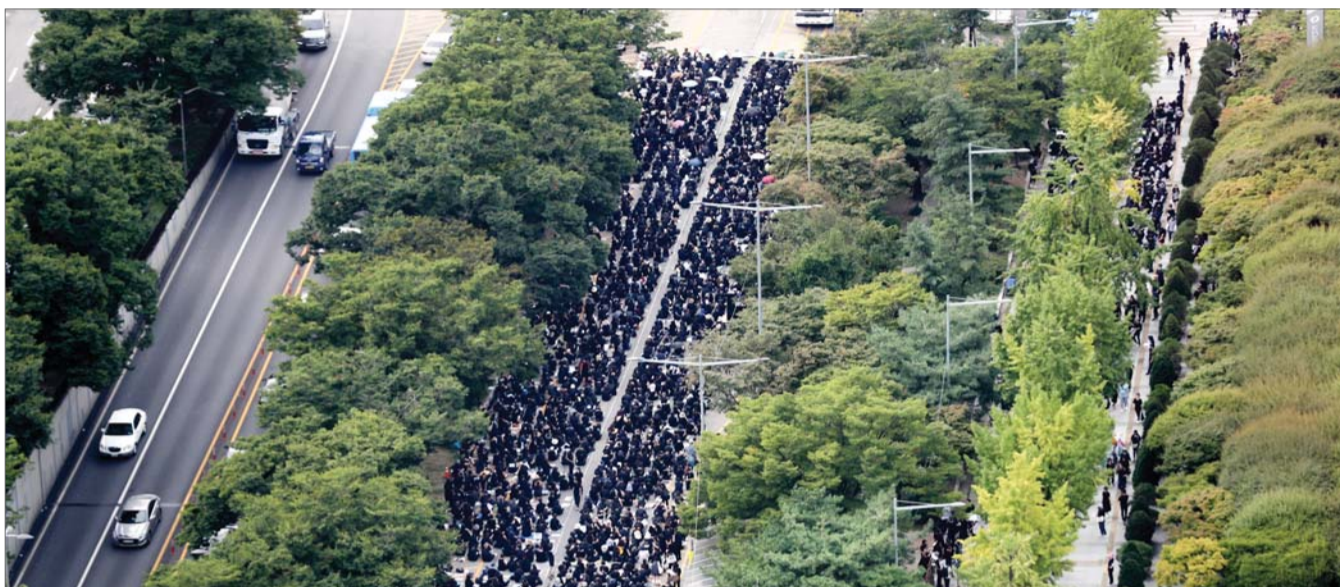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개인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오고,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주담대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올해 1월 1만7841가구에서 7월 3만6260가구로 2배가량 뛰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1161가구에서 3804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당국, DSR 40년 적용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해 일각에선 50년만기 주담대에 DSR을 40년을 적용할 경우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5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DSR 비율(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가능한 원리금은 2600만원이다. 현행대로 은행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세 일인 4일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와 시민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L7면> /뉴스

에서 4.5%의 금리로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5억1600만원이 나오지만, DSR을 40년으로 줄일 경우 한도는 4억8100만원이 나온다. 기존방식보다 한도가 약 7%, 3500만원이 감소한다.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면 부족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한도가 줄었으니 추가 부채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50년만기 주담대가 공급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50년만기로 늘렸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올 4~5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 흐름은 부동산 시장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부, 수출 반등 총력전... 연내 181조 마중물

인프라 보강, 품목·지역 다변화 등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확정

수출이 11개월째 하락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반등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무역·수출 지원 등 수출 인프라 보강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골자다.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 보강한다. 수출기업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3984개사 대상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기업 수와 기업당 지원 금액을 늘리는 한편, 수출 실적에 없는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도 발굴해 지원하고,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에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 공장 특허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비전문인력(E-9) 1만명, 숙련기능인력(E-7-4) 3만명 등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연말까지 추가하고, 내년까지 쿼터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 주력산업 지원 품목·지역 다변화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당 50억원 한도 연구개발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차세대 전기 연구개발 신속 예타를 추진한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日, 경제성장률 1위 질주 韓은 OECD 평균 턱걸이

韓, 올해 성장률 1.4% 전망
日은 상반기에만 2.4% 성장

일본이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1위까지 치고 나가는 사이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최근 세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전분기대비)에 0.3%, 2분기에 0.6%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1, 2분기 합) 0.9%로, 2분기까지의 성장률이 공개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12위에 그쳤다. 한국 성장률은 OECD 평균(1분기 0.5%·2분기 0.4%)과 같다.

반면 일본 경제는 1분기 0.9%, 2분기 1.5%로 상반기에만 2.4% 성장했다. 31

개국 중 2%대 성장률을 나타낸 상위 3개국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수치가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전년대비)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성장률 목표를 1.4%로 잡고 있다. 연말까지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저성장의 대명사였고, 한국은 성장률에서 일본에 줄곧 앞서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에도 한국은 1분기 1.8%, 2분기 0.9%, 3분기 0.1%, 4분기 1.4% 등으로 일본(-0.3%, 0.5%, -0.4%, 1.1%)에 앞섰다.

그러나 2022년 들어 2분기(한국 0.8%·일본 1.3%)와 4분기(한국 -0.3%·일본 0.0%)에 상대국에 뒤처지는 흐름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북한 비핵화·불법행위·인권, 국제 사회에 공조 촉구할 것”
▲ 與 “윤미향, 임수경 시즌2... 의원직 제명해야” <사진 뉴스스>

▲ 대통령실, 안보실 인사에 “채상병 사건 꼬리자르기 아니다”
▲ 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 입법예고



▲ ‘친명계’ 정진욱, 이재명 대표 동조 단식 농성 돌입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사진 뉴스스>